

겨울철 휴업보상제 실시에 대한 소견



허관행
(사)한국오리협회 과장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4년간 7차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를 겪으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철새에 의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AI 바이러스는 최근 축종을 불문하고 최첨단 사육시설과 철저한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AI의 발생원인은 국내 유입된 바이러스의 차량, 사람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할 뿐이다.

거의 매년 AI를 겪으면서 막대한 방역예산이 투입되고 국민의 여론까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AI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AI 및 구제역 방역제도 개선 대책(안) 자료를 보면 각종 과태료 기준 상향, 살처분보상금 감액 비율상향, 삼진아웃제, 가축방역세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다.

특히 정부에서 검토 중인 휴업보상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AI 발생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전국의 육용오리 및 토종닭 사육을 휴업하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AI는 최근 계절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다양한 유형의 AI가 국내로 유입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및 관련 업체 등 산업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휴업보상제도는 자율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농가, 계열업체, 지자체의 참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계열화사업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까지 수매비축을 완료하고 철새가 집중 도래하는 11월부터 2월까지 육용오리와 토종닭 입식을 제한한다. 이 기간 동안 농가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는 수매비축을 위한 도축 또는 냉동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첫째, 겨울철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10월 이전 집중 사육으로 오히려 다른 시기에 밀집사육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지역별 농가들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열업체별 사육경쟁으로 사육시설이 다소 미비한 농장에 무분별한 입식과 휴지기간의 감소 등 가금류 관리소홀 등의 상황이 예상된다.

둘째, 종계, 종오리의 경우 특성상 휴지기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휴지기동안 생산되는 종란에 대한 폐기가 불가피하므로 손실보상이 필요하나 정부의 휴업보상 내용에서는 빠져있으며, 이에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장 유통구조상 신선육의 확보와 공급은 필수적이지만 동기간 내 냉동 가금산물로의 대체는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냉동육의 경우 신선육과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은 품질이라는 인식으로 소비감소 피해가 예상된다.

넷째, 관련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깃짚생산업체, 도축·가공업체, 유통업체, 요식업체 등 전 후방산업에 걸쳐 수익감소와 경영상황 악화 등 피해가 우려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휴업보상제 실시에 따른 농가, 업계 등에 대한 보상수준이 평상시 대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사육이나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소수준의 지원만 가능할텐데 그 수준이 과연 합당하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수준이 될 것인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휴업보상제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AI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중인 휴업보상제는 농가와 업계에 또 다른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실시 이전에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전문기관을 통해 휴업보상제의 득과 실에 대한 사전 연구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휴업보상제는 AI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기에 지금이라도 AI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가축의 면역력 증진, AI에 최적화된 사육환경 조성 등 축산업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과 함께 최근 논란중인 AI 백신 시행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